

01

기후위기 시대, 성장 중심 그린뉴딜을 넘어

김태호(Kim, Tae Ho)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전략기획실장

babodanet@hanmail.net

티핑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등장한 그린뉴딜의 확산은 매우 긍정적이나 여전히 성장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때 유행하다 사라지는 정부 정책으로 종료되거나 그린워시(Greenwash)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의 해법으로서, 그리고 성장 중심의 그린뉴딜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한다.

키워드 : 기후위기, 그린뉴딜, 코로나19, 탈성장, 그린워시,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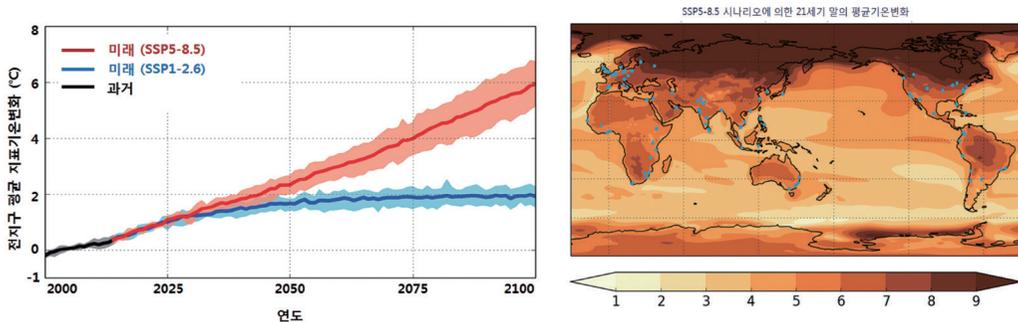
1. 되돌아 올 수 없는 기후위기¹⁾의 가속화

1)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 티핑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는 기후위기

- 2018년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약체(이하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와 산업활동으로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이 0.87℃ 상승했고 이르면 2030년 쯤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전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극한고온,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온난화 속도와 규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 달성을 권고함
- 세계기상기구(WMO)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2015~2019년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보다 1.1℃ 상승하였고,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평균농도가 2019년 말에 410ppm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보여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됨
- IPCC의 신규 온실가스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경제경로)를 고려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 대비 +1.9 ~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름철 북극 해빙은 21세기 중반 이후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모의됨
 - 21세기 말 주요 도시의 기온 상승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0.8 ~ 4.5℃, SSP5-8.5 시나리오에서 +3.3 ~ 10.2℃ 상승 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림 1 | 전지구 평균기온 변화 및 21세기 말의 평균기온 변화



주. (좌) 현재기간(1995~2014년) 대비 2000~2100년의 연도별 전지구 평균기온 변화(°C) / (우) SSP5-8.5 시나리오에 따른 현재 대비 21세기 말의 평균기온 변화(°C)와 주요 도시(청색 점)
 자료 : 국립기상과학원(2019),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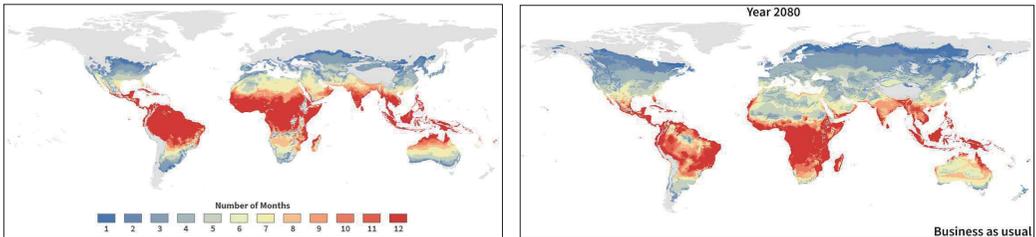
1)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는 이제 기후시스템과 인간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음

- 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오를 경우를 인간이 기후를 통제하기 불가능해지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특정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더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기를 뜻함)라고 지적하였는데, 영국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가 이미 지났다’²⁾고 충격적인 경고를 하였음
 - 현재 티핑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후시스템은 ‘영구 동토층’의 광범위한 해빙과 서남극 빙상 및 아마존 열대우림의 손실이며, 이들은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근접한 상태로 분석됨
 - 문제는 티핑포인트에 근접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치명적인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영구동토가 녹으며 75년 전 탄저균에 감염된 순록이 땅 위로 드러나 주변을 오염시키면서 12세 소년이 사망하고 순록 2,300마리가 폐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음³⁾

■ 코로나19(COVID-19)와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의 역할

- 최근의 감염병 발생과 확산은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은 박쥐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과 인간 사회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면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거나 기온 및 해수 온도 상승, 강우 패턴 변화, 습도 상승 등으로 감염병 발생과 전파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악화가 우려됨. 이에 기후위기의 파국적 진행을 막거나 완화해야 함
 - 지구온난화로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의 질병을 전파하는 모기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그림 2 | 세계 지역별 이집트 모기 서식 기간 : 현재(좌) 및 2080년(우)



자료 : <https://earth.stanford.edu/news/how-does-climate-change-affect-disease#gs.5ec5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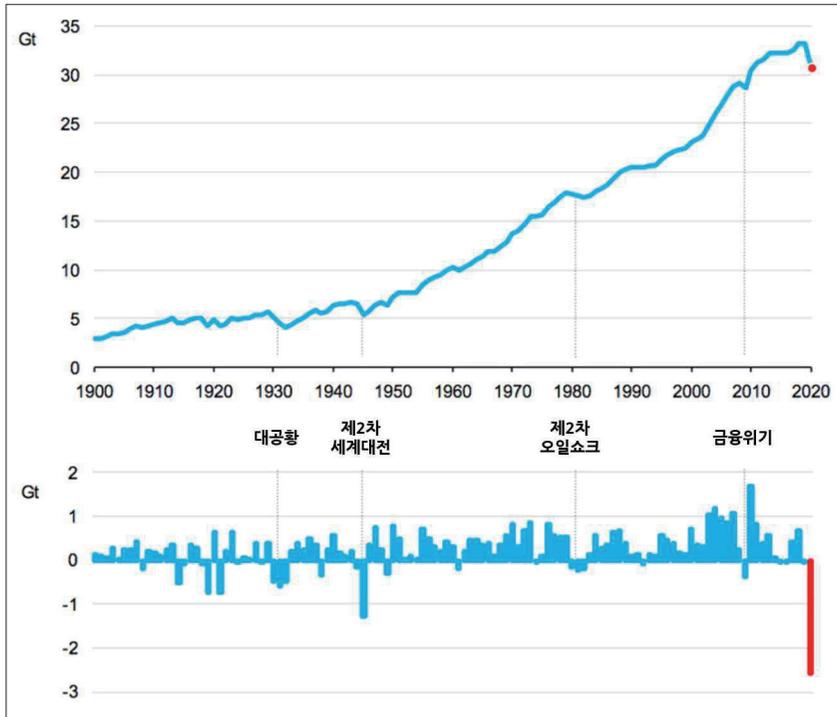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봉쇄조치로 인해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음
 -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하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60년 만에 수질이 개선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봉쇄 기간에 중국 내 이산화질소는 40%,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 정도 감소하는 등 세계 도처에서 고질적인 수질오염이 개선되고 생태계도 회복되는 등 환경 개선이 관측되고 있음. 다만, 이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부수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2) 영국 과학자들 충격 경고 ‘기후위기 ‘티핑포인트’ 이미 지났다’(프레스시안, 2019.11.28.)

3) “빠르게 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판도라의 질병 상자’ 열리나”(문화일보, 2019.7.19.)

-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린 지구탄소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 국제공동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올 4월 20일까지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17%까지 줄었다고 하며, 이중 절반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함
-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19년 대비 6%, 전력 수요는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70년을 통틀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 줄어들 것으로 전망⁴⁾하였음. 이는 작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탄소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명시된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간 매년 필요한 탄소 감축량과 일치함

| 그림 3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탄소배출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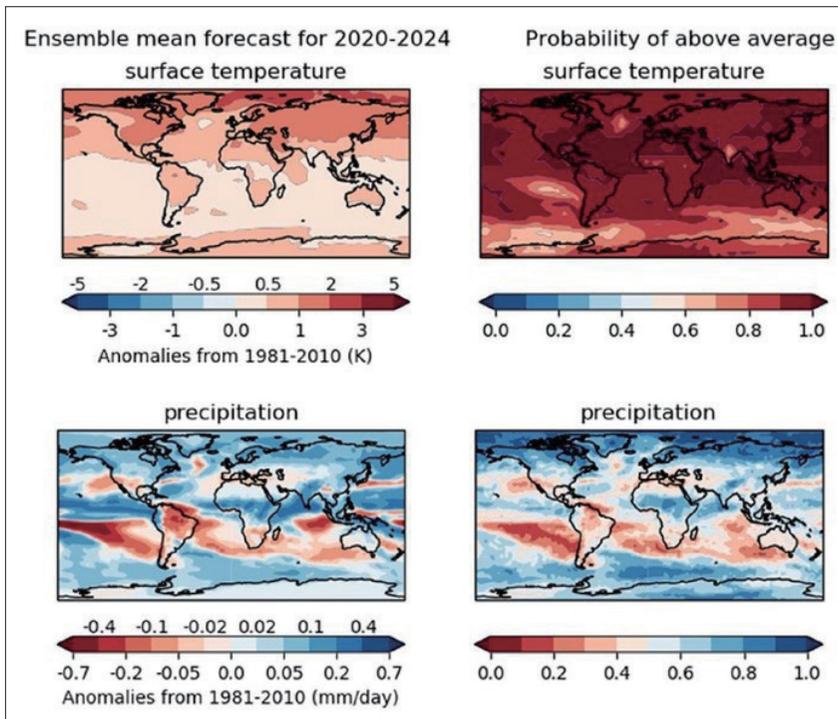
주. (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 (아래) 연간 변화 ※ 단위 : GtCO₂
 2020년 예상 수준은 빨간색, 다른 주요 사건들은 이번 배출량 감소 규모 체감을 위한 참고용
 자료 : 카본브리프(Carbon Brief), "IEA : Coronavirus impact on CO₂ emissions six times larger than 2008 financial crisis"(2020.4.30.),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4) 국제에너지기구(IEA), 『2020년 글로벌 에너지 리뷰(Global Energy Review 2020)』, 2020년 5월

■ 하지만,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와 근본적 전환 필요

- 2020년 6월 5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Mauna Loa) 측정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발표함
 - 마우나로아 측정소에서 5월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1ppm으로 5월 수치로서는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월보다 2.4ppm 증가한 수치임
 - 전 지구 이산화탄소의 월평균 농도가 400ppm을 돌파한 해는 2015년이며, 400ppm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높은 수치임. 우리나라는 충남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3년 400ppm을 넘어섰으며, 지난 10년간 관찰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평균 2.4ppm 증가하였음
- 세계기상기구(WMO)의 최근 보고서⁵⁾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2024년까지 연평균 1.5℃의 온난화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는 눈 앞에 다가온 상황임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하루 17메가톤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어 WMO가 보고한 것처럼 일시적 감소는 최대 0.1도의 차이를 만들 뿐이며, 페테리 타알라스(Petteri Taalas) WMO 사무총장은 “대기 중 CO2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올해의 실질적인 배출 감소로 인해 대기 중 CO2 농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⁶⁾

[그림 4] 1981~2010년 대비 2020~2024년 이상에 대한 기온 및 강수량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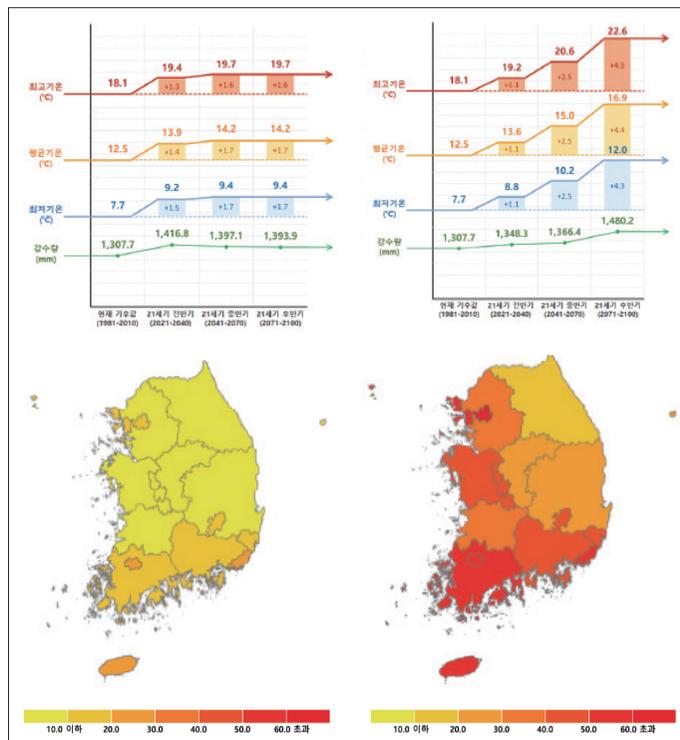
주. (좌) 앙상블 평균 (우) 평균 이상의 확률
 자료 : 세계기상기구(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5) 세계기상기구(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0. 7)

6) WMO(세계기상기구), “2024년까지 평균기온 1.5도 상승, 코로나도 일시 정지효과 없다”(더사이언스플러스, 2020.7.11.)

-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최근(2011~2019년)이 과거(1912~1920년)보다 1.8°C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86.1mm 증가하였으며,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른 21세기 말(2071~2100년) 기후전망은, 평균기온이 현재(1981~2010년) 대비 +1.7 ~ 4.4°C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은 현재 대비 +6.6 ~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온상승에 따라 고온 관련 극한기후지수는 증가하고 강한 강수 증가, 약한 강수는 감소하여 강수의 양 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 미래에도 폭염·열대야·여름일수와 같은 고온 극한기후지수 증가, 한파·결빙·서리일수와 같은 저온 극한기후지수는 감소하고, 5일 최대강수량, 강수강도와 같은 호우 극한기후지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5 |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에 따른 기온-강수 변화(위) 및 21세기 후반기 폭염일수(아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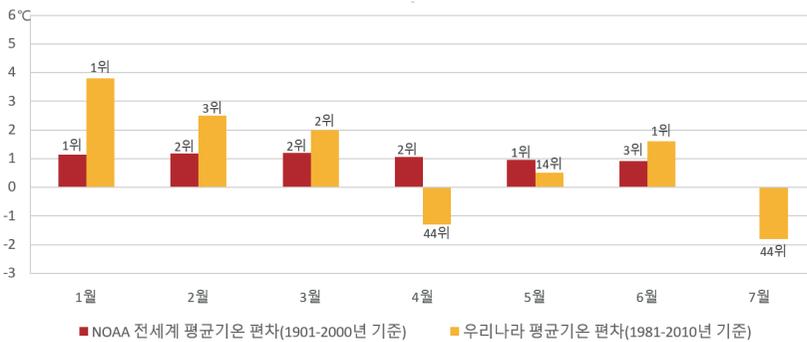
주. (좌) 온실가스 저배출 시나리오(RCP2.6) (우)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RCP8.5)
 자료 :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2018년

- 전 지구 및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한반도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10년(2010~2019년)의 연평균 기온의 평년값(1981~2010)에 비해 0.5°C 높았으며, 2014년 이후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해가 없었음
 - 폭염일수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 일수(33°C 이상)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10년대에는 평균 15.5회를 기록함(1980년대 평균 9.4회 → 1990년대 평균 10.9회 → 2000년대 평균 10회)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의 증가로 지난 10년간 과거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였음
 - 폭염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그 강도가 강화되고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함. 특히, 2018년 여름철 폭염/열대야일수가 111년 관측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여 국가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였음

- 온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초반 길고 강한 한파가 발생하였으며, 단기간 지역적으로 집중 호우가 빈번해지는 반면, 장기적으로 가뭄(2015~2017)이 발생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여름철 이상기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올해 6월에 때 이른 폭염으로 역대 1위를 기록한 반면 7월에는 매우 선선(44위)하여 이례적으로 7월의 평균기온(22.7℃)이 6월(22.8℃)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1973년 이후 처음 나타남
 - 올해 1월부터 7월 평균기온은 역대 3위(12.7℃, 평균 11.6℃)이며, 월 평균 기온은 1~3월과 6월에 역대 1~3위를 기록하였으나, 4월과 7월은 44위를 기록하면서 월별 기온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났음, 반면, 전세계 금년(1~6월)의 평균기온(평균편차 1.07℃)은 역대 2위(1위 2016년 평균편차 1.12℃)이며, 1~6월 동안 지속적으로 1~3위를 기록하고 있음⁷⁾

〈그림 6〉 2020년 전세계(1~6월)/우리나라(1~7월) 월별 평균기온 평년편차 시계열 및 역대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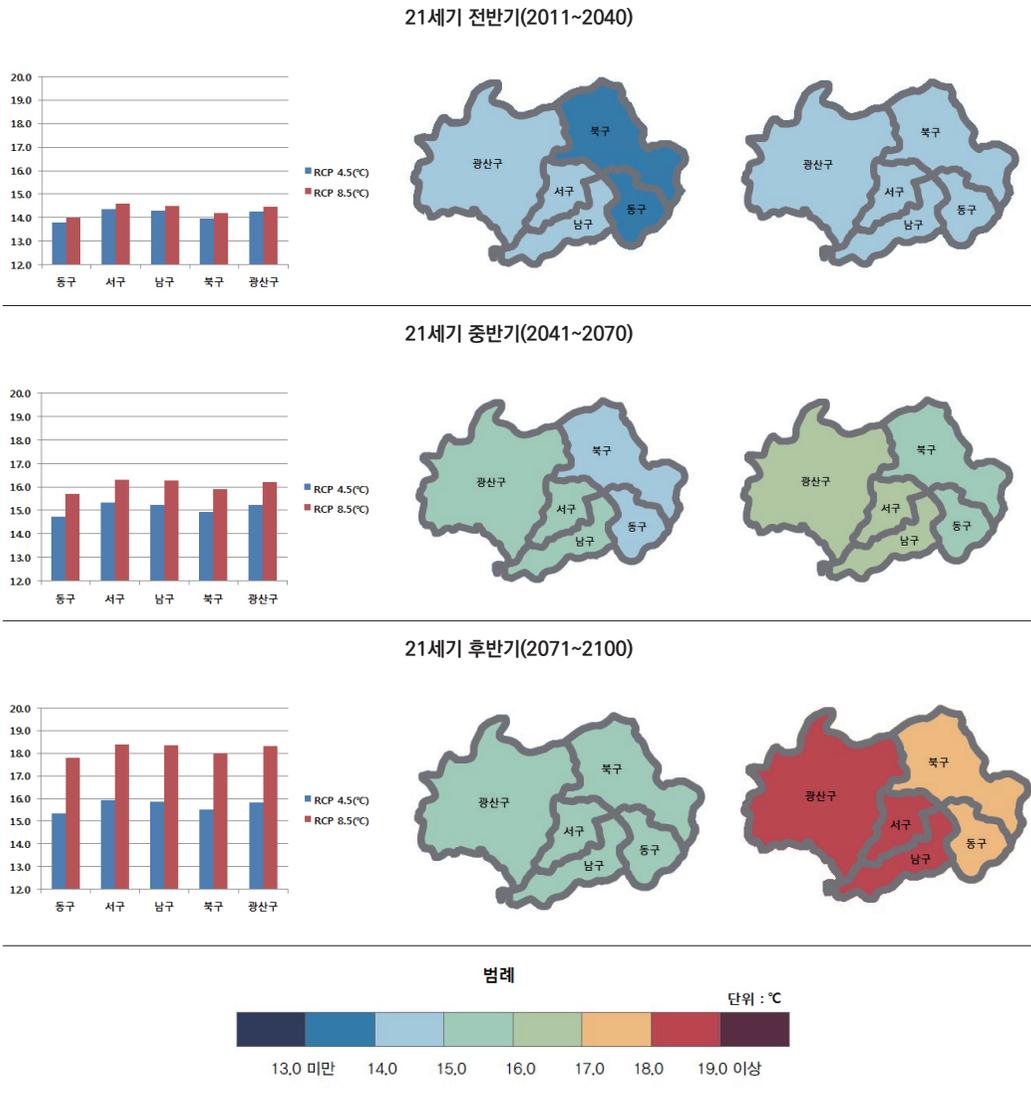


자료 : 기상청,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 및 지구 기후전망", 2020.8.13

- 2021년 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으로 감축)를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세계 7위 수준임.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1인당 13.8톤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13.8톤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함
 -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7억 914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최대 배출량을 기록하였던 2013년의 6억 9670만 톤을 넘어섰음
 - 저먼워치(German Watch)가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한국은 전체 61위 중 58위로, 지난해 57위에서 한 단계 떨어져 기후변화대응 성적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음
- 광주광역시시는 2010년 이후 연평균기온이 이전 50년(1960~2009년)보다 약 1℃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폭염 평균일수는 21.7일, 열대야 평균일수는 21.8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폭염 평균일수는 1991~2009년 12.5일에서 2010~2019년 21.7일로 9.2일이 증가하고, 열대야 평균일수는 1991~2009년 12.8일에서 2010~2019년 21.8일로 9.0일이 증가하였음
 - 폭염 평균지속일수도 1991~2009년 5.2일에서 2010~2019년 11.7일로 2.3배 증가하여 도시 온열현상으로 인한 생활·건강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7) 기상청,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 및 지구 기후전망", 2020.8.13.

| 그림 7 | 광주광역시 연평균 기온 전망 RCP4.5(좌), RCP8.5(우) ⑧



자료 : 광주광역시, 「제2차 광주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6년

-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연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21세기 중반기에 1.6℃, 후반기에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 배출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대비 21세기 중반기 2.1℃, 후반기에 3.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즉각적이며 강력한 추진여부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연평균기온은 현재보다 21세기 중반기 0.5℃, 후반기 1.8℃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래 폭염일수는 우리나라 평균 폭염일수에 비해 29.8일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됨

⑧ RCP4.5(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8.5(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표 1 | 광주광역시 현재 기후값 대비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의 변화량(RCP 8.5)

| 구분 | 평균 기온 (°C) | 최고 기온 (°C) | 최저 기온 (°C) | 강수량 (%) | 폭염 일수 (일) | 열대야 일수 (일) | 한파 일수 (일) | 호우 일수 (일) | 5일최다 강수량 (%) |
|-------|------------|------------|------------|---------|-----------|------------|-----------|-----------|--------------|
| 우리나라 | +4.1 | +4.3 | +3.9 | +9.0 | +25.3 | +41.5 | -5.0 | +0.3 | +25.5 |
| 광주광역시 | +3.9 | +4.2 | +3.6 | +12.5 | +55.1 | +52.3 | -0.7 | +4.1 | +35.2 |

주. RCP 8.5 :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나리오
 자료 : 기상청,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2018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9,359.6천톤CO₂eq.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2017년 에너지부문 연평균 증감률은 약 1.9%, 비에너지부문의 경우 약 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10년 이후 8년 만에 5.8%가 증가하였음
 - 발생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송(29%), 상업(20%), 가정(20%), 산업(19%), 폐기물(5%), 공공 및 기타(4%) 순으로 나타나며, 건물 부문(가정과 상업의 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증가 추세였으나, 기후변화대응시책 추진, 인구변화, 경제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2013년 이후 정체된 상태임
 -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3년간(2008~2020년)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은 6,533천톤CO₂eq.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4%에 해당되는 양이며, 2030년 배출전망치의 56.4%에 해당함. 매년 평균 감축량은 503천톤CO₂eq로 2010년 배출량의 5.7%에 해당되며, 2020년 배출 예상량의 6.6% 감축이 예상됨

표 2 |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배출량 | 8,098 | 8,264 | 8,842 | 8,796 | 8,907 | 9,371 | 9,347 | 9,210 | 9,308 | 9,279 |
| 배출량 증감률(%) | 1.3 | 2.1 | 7.0 | -0.5 | 1.3 | 5.2 | -0.3 | -1.5 | 1.1 | -0.3 |
| 1인당 배출량 (tCO ₂ eq.) | 5.64 | 5.72 | 6.02 | 5.95 | 6.00 | 6.30 | 6.26 | 6.18 | 6.25 | 6.25 |

자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 『2019년 광주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배출특성 연구보고서』, 2019

2. 기후위기 인식 확산에 따른 그린뉴딜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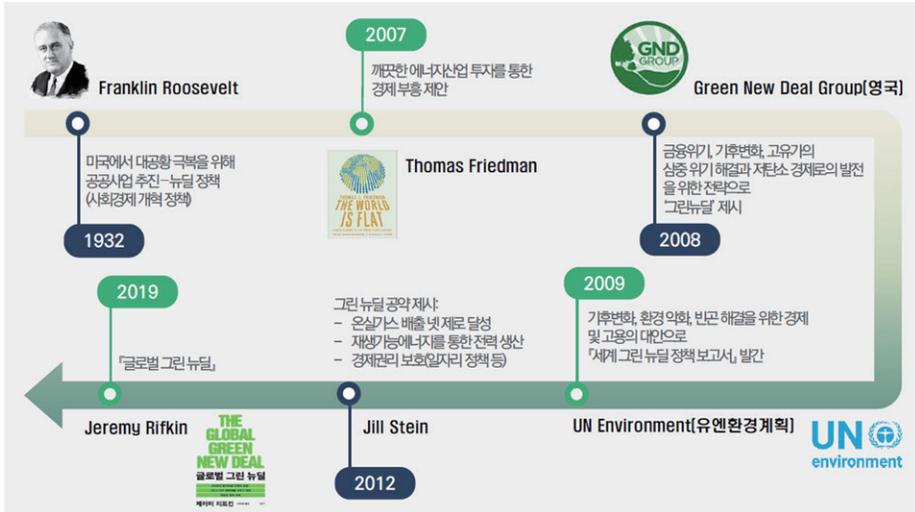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티핑포인트의 도래 임박이라는 현실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이 확산되고 있음
 - 스웨덴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시위 전 세계로 확산. 2019년 3월 15일 집회에 128개 국가, 2,333개 도시에서 청소년 140만 명이 참여. 영국에서는 시민들의 ‘멸종 저항’행동이 활발해지고 있음⁹⁾
 - 전 세계 153개국 11,258명의 과학자들은 국제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BioScience)’에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지구가 파멸적 위기(Catastrophic threats)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후비상 상황(Climate emergency)’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의제로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머리를 맞댄 지 꼭 40년 만에 나온 것임¹⁰⁾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 지구 위험 보고서(2020.1)’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기후행동 실패’를 선정함
 -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는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 메시지로 “코로나1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이고 끔찍한 것.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라는 모닝콜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환경위기는 더 깊은 비상사태(deeper emergency)”라고 강조함(2020.4.)
 - 전 세계 25개국 1,216개 지자체 기후비상사태 선포, 해당 인구는 7억 9천 8백만 명에 달함(2019년 12월 27일 기준). 11월 28일, 유럽의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할 것을 촉구함(이유진, 2019)
 - 우리나라 또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함. 단체인원이 공식인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지자체이며, 이는 세계 최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임.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가 지방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행,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와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음¹¹⁾
- 그린뉴딜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등장하여,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 유럽연합(EU)의 기후 비상선언과 그린 딜 발표,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기후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음
 - 뉴딜(New Deal) 정책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 로즈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했던 적극적 시장 개입 정책으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설립, 긴급은행법 제정 등을 시행한 정책이 최초의 뉴딜 정책이었으며, 미국의 뉴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 기후변화, 고유가의 삼중위기 해결과 저탄소 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이 제시되었으며, UN환경계획은 2009년 기후변화, 환경약화, 빈곤해결을 위한 경제 및 고용의 대안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함

9) 이유진, 『그린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국토연구원, 2019.12.

10) “지구기후 비상사태” 153개국 과학자 1만1천명 시국성명 (연합뉴스, 2019.11.6.)

11)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세계 최대 규모 (동아닷컴, 2020.6.5.)

| 그림 8 | 그린뉴딜의 등장과 역사



자료 : 윤재용,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 그린뉴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5.18.

-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목표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코로나 이후 그린딜(2050년 탄소중립국가 달성, 10년간 1조 유로 공공투자)을 핵심과제로 지속 추진하기로 발표(2020.3.17.)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당시 그린뉴딜 적극 추진, 트럼프 집권 후 폐기된 것을 바이든(1.7조 달러 투자) 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부활시킴
-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의원 9명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Alexandria Ocasio-Cortez 2019)
 - 결의안은 총 14쪽이며, 1.5도 IPCC 특별보고서로 시작해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문제에 대해 강조.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50년에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함. 결의안은 2014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경제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면 기후변화 정책이 주류화된 유럽에 그린 뉴딜을 표방한 미국까지 가세해 온실가스 넷 제로를 위한 세계 경제전환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 큼
- 지난해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들의 연합체인 C40 기후리더십그룹 시장총회에서 글로벌 그린 뉴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그린뉴딜로 도시 산업, 건물, 교통, 폐기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1.5도 이하 안정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기후위기 고려, 가장 영향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망 구축,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함(서울시도 그린뉴딜지지 선언에 동참)
- 유럽은 EU 20-20-20 프로토콜¹²⁾ 선언 이후 전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출범, 화석연료 100조 달러 좌초자산¹³⁾ 문제의 대두 등을 거친 후 2019년 EU 집행위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을 제안하

12)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율 20% 달성, 에너지 효율 20%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이 프로토콜의 핵심이며,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세계가 탄소 후 문명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선언

13) 좌초자산 :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게 되는 화석연료와 방치되는 송유관과 해양 플랫폼, 그리고 화석연료 문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산업의 의미함

고 2020년 1월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함

- 기후변화대응이 늦어질 경우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선도자(first mover)로 신경제의 표준을 선점하여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¹⁴⁾
- 유럽의 그린딜은 2030년 감축 목표를 최소 50%, 최대 55%로 조정(이전 계획 최소 40% 감축)하고, 2050년 넷 제로(Net Zero)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EU와 동일한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이후 EU 집행위는 7,500억 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계획안을 발표(2020.5.27.)하였는데, 계획의 초점은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있으며, 계획안에 '그린딜'을 포함하고, 모든 지원은 녹색전환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는 녹색 조건이 붙으며, 예산의 25%가 기후친화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정부는 지난 5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로 함. 현 정부 그린뉴딜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그린 경제 가속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임

-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임. 그린뉴딜로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를 추구한다고 밝힘(제7차 국가경제회의, 2020.7.14.)
-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 부각이라는 배경으로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입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일자리 66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의 경우 녹색전환의 목표인 탄소중립의 시점이나 탈석탄, 탈내연기관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와 그린뉴딜의 핵심요소인 분배와 형평성 문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부문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여전히 개발사업, 부족한 재정투입, 에너지 가격·세제개편과 같은 제도 개선 부재,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가 없이 추진됨으로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분석과 개선 논의는 확장될 것으로 보임¹⁵⁾

■ 광주광역시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에 맞춰 광주형 AI-그린뉴딜 비전보고회(2020.7.2.1)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과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함

- '정의로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그린뉴딜 목표로 하는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2020.8.19.)
- 글로벌 그린공동체가 함께하는 녹색전환도시,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미래형 환경융합산업 메카 녹색산업도시라는 3가지 추진방향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45% 감축,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

14) 이혜경,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29.

15) 이유진, 「지역기반 그린뉴딜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포커스>, 2020.7.31.

- (Green Democracy) 시민 주도 에너지 분권 실현, (Green Energy)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Green AI Infra) AI 연계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기후안전 녹색인프라 강화, AI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 깨끗한 물환경 인프라 구축, 청정대기·공기산업 등 환경융합산업 육성, 기후환경 일자리와 시민 참여 확산이라는 8대 과제로 설정하였음

3. 성장 중심 그린뉴딜을 넘어서

-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이라는 방향에서 '경제 위기'의 해법인 반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의 해법으로서 전환(Transition), 회복(Restore), 공생(Symbiosis)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뉴딜은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그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토목 건설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후 기후위기 및 불평등 심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등장한 그린뉴딜은 코로나19 대응과 결합하면서 초기 그린뉴딜의 개념에서 보다 확장된 측면이 있지만 녹색성장이나 그린뉴딜 모두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이나 경제 부흥 정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의 차이

| 구분 | 녹색성장(Green Growth) | 그린뉴딜(Green New Deal) |
|------|-------------------------------------|---------------------------------------|
| 추진배경 | 에너지·자원 효율성, 환경부하 최소화, 신성장 동력 | 기후위기 및 불평등 심화,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결합) |
| 개입방식 | 시장 주도형 정부개입 | 정부 주도형 시장개입 |
| 중점분야 |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너지 효율화 등) | 기후변화대응(감축 및 완화 통합) |
| 투자중심 | 녹색산업 성장 중심 | 인프라 중심(에너지, IoT, 교통) |
| 기술기반 | 녹색 기술 기반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휴먼기술) |
| 주요목표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

- 물론 그린뉴딜은 현실적 대안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지만 철저하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최초의 뉴딜은 양적인 일자리 확대와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위기라는 한가지 목표를 달성함. 하지만, 그린뉴딜은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환경성'과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 의 기준이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환경정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원칙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함. 때로는 성장을 버릴 수도 있는 과감한 정치적 선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함

■ 그린뉴딜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잘못된 방향으로의 그린뉴딜은 오히려 그 목적을 상실하고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한때 유행하다 사라지는 문제인 정부의 정책으로 종료되거나 그린워시(Greenwash)¹⁶⁾로 평가받을 수 있음

- 그린뉴딜의 첫 번째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여야 함. 그린뉴딜의 다양한 사업은 모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및 공동체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음. 이에 분명한 탄소 순배출 제로라는 감축 목표 설정과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적응 인프라 강화가 중요함
- ‘뉴딜’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 공적자금 투입 이후 민간부문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이에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함
- 화석연료 기반 좌초 자산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메커니즘과 전환 기금의 설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재구성이 필요함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이나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부문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전 영역에서의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함. 현재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분리 방식이 아닌 디지털 그린뉴딜, 전환적 그린뉴딜, 정의적 그린뉴딜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그린뉴딜이 추진되어야 함
 - 에너지·교통·건물 등 도시공간에서의 인프라를 전환하는 디지털 그린 플랫폼(Digital Green Platform), 공유와 순환 경제·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성장 가치 체인(Local Growth Value Chain),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재분배·재생산을 포함하는 프로슈머 플랫폼(Prosumer Platform)이라는 3가지 전략이 상호간 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와의 녹색전환에 대한 거대한 새로운 딜(Big New Deal)이 전제되어야 함

■ 기술이나 산업 성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지구나 자연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며, 그 원인이 된 무한성장주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과의 공생과 협력, 분배라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은 동력원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비용의 제로화, 효율성 증대는 한계 비용¹⁷⁾ 제로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사회·경제구조를 분명하게 전환경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무한한 형태의 소비와 자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기술에 기반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넘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과 억제, 그리고 공정한 분배에 입각한 지구 생태계 내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가치에 대한 전환이 전제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음.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 공생을 위한 합리적 생산과 소비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그린뉴딜은 그런 점에서 탈성장 논의와 함께 갈 필요가 있음

16) Green(녹색)과 Whitewash(분칠)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을 내세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속이 행동을 가리킴. 정부 정책에서는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말하며, 넓게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치우친 정책 전반을 말하기도 함

17) 한계비용 : 고정비용이 흡수된 후 재화나 용역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는 문제에 대한 지식과 해결에서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의 원칙은 모든 부문에서의 불평등 해소, 그 결과로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는 현실 직시임. 즉, 기후위기를 나의 문제, 공동체, 넓게는 지역의 문제로, 그리고 현실적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전환을 위해서는 의식, 사회·경제구조, 재정투자의 전환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전환임. 기후위기는 현실적 인식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전환 시대에 맞는 그린뉴딜러(Green New Dealer)를 양성하고, 그린뉴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창출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그린뉴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음

- 그린뉴딜을 기존 사업에 대해 디지털을 결합한 녹색 포장의 접근이나, '런드리 리스트'(해야 할 일을 잔뜩 모아 놓은 목록)의 제시가 아닌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담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도 필요하지만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제되어야 함
 - 그린뉴딜의 대표적 주장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린뉴딜의 실행과 관련되어 '피어 어셈블리(Peer Assembly, 참여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는 동배 의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피어 어셈블리는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분산된 운영방식이고,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며, 운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방식이라고 말할. 또한, 전환과정의 각 단계에 즉각적으로 참여하고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역 시민 30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며, 이들 시민의 역할은 자신의 속한 공동체의 그린 뉴딜 사안 논의, 그린 뉴딜 로드맵의 작성과 지역사회 연계 통합, 그리고 실행 시도에도 긴밀하게 관여하는 것이 됨. 즉,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들과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들의 수평적 협의체가 바로 피어 어셈블리임¹⁸⁾
 - 수평적 협의체의 필요성은 '분권과 자치'라는 측면뿐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권한과 통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후위거나 코로나와 같은 위기 대응에서 그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확인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산불, 태풍, 전염병 등과 같은 기후재난이 올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전체 공동체 모두가 협력하는 더 수평적이고 분산된 새로운 거버넌스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칭)온라인 시민 아고라'를 만들어 그린뉴딜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의 촉진과 참여 보장이 필요함

- 되돌아 갈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급하며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일상화된 재난에서의 도시 및 공동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우리는 현재 겨울부터 봄은 미세먼지라는 사회재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폭염이라는 자연재난,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일상화된 감염병 재난이라는 3가지 재난에 직면하고 있음. 여기에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의 빈도수와 강도의 강화는 현실적인 적응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18) 제레미 리프킨, 『글로벌 그린뉴딜』, 민음사, 2020.1.31.

- 이러한 재난의 원인은 화석연료 기반의 무한성장주의이며, 이 결과로 벌어지는 기후위기의 문제임. 그래서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서 에너지전환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으며, 수요감소와 효율화를 지향하는 디지털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촉발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 전략이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인프라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적응역량을 지역에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과 정책적 우선 투자가 필요함
- 도시에서 기후변화는 온도 및 강수와 관련된 폭염, 폭우, 가뭄 등을 초래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이 도시의 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후도심지역의 건축물에서 에너지의 효율이 낮으므로, 탄소배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표 4 | 주요 기상재해의 특성 및 잠재적 영향

| 구분 | | 폭염 | 폭우 | 가뭄 |
|------------|---|--|--|----|
| 재해 규모 | 발생기간 | 중기~장기 | 단기~장기 | 장기 |
| | 크기 | 중~대 | 중~대 | 대 |
| | 잠재적 이재민 수 | 대 | 중 | 대 |
| 대표적인 피해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불량주택 밀집지역 • 고밀도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 저지대 및 산 • 인프라 구축 미비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관련시설 미비지역 | |
| 도시의 잠재적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방 에너지 수요 증가 • 대기의 질 악화 • 열섬현상으로 인한 기온상승 • 산불위험 증가 • 식품 생산량 감소 • 수질문제 발생(조류) • 노인 및 영유아, 빈곤층 피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의 위험 증가 • 산사태의 위험 증가 • 지반침하 및 토양침식 발생 • 기반시설의 피해 •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 • 수인성 감염질환 사망 증가 • 시골지역으로부터 이주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부족/고갈 • 수력발전 가능성 감소 • 시골지역으로부터 이주 발생 • 높은 식량 가격 | |

자료 : 김정곤 외, 『기후변화 적응 도시모델 및 적용기법 개발』, 토지구획연구원, 2014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함. 하지만, 현재의 그린뉴딜 논의와 추진은 여전히 기계적, 산업적,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포용력 확장으로 접근되어야 함
 -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화석연료 기반의 모든 구조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과학자들이 고안한 탄소시계(the carbon clock)에 따르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년에 불과하다고 함.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의 시간은 갈수록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그린뉴딜을 접근해야 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가 아닌, 또 다른 성장을 위한 해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하며 즉각적인 행동으로서 그린뉴딜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간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공생하기 위한 포용적 민주주의로서 확장되어야 함